

IFRS17 주요 처리가정 가이드라인

2024. 11.

관계기관 합동

I. 추진배경

□ IFRS17 도입으로 계리가정의 재무적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, 원칙 중심 기준서 특징상

○ 회사별 가정 편차에 따른 ‘고무줄 회계이익’ 논란 제기

* IFRS4 대비 IFRS17 이익 증가율('22년말 주식 사전공시) : △782% ~ 189%

□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되는 손해율, 해지율 등을 낙관적으로 가정할 경우 보험계약마진(CSM)이 과대계상

① (무·저해지상품)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임에도 완납 직전까지 해지가 발생한다고 가정

- 계약자의 비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수익성을 산출하고, 보험료를 할인하여 상품 쏠림현상* 심화

* 신계약 무·저해지상품 비중(보장성 초회보험료): 11.4%('18년)→30.4%('21년)→47.0%('23년)

② (단기납종신) 보너스 지급시 환급률이 높은 상품에 대해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 다수

- 향후 보너스 지급시점(예: 10년 이후) 추가해지 발생시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 우려

③ (손해율) 다수 회사가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*을 경과 기간·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음

* 최적위험률(보험부채 결산시 적용) = 예정위험률(보험료 반영) x 손해율 가정

- 연령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 등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현금흐름이 부정확하게 추정될 소지

□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아 리스크가 먼 미래로 이연되고, 실제 관측값에 따라 향후 건전성* 저하 우려

* 美 Mid-Continent('97), Penn Treaty('17) 등은 무저해지상품 판매 후 지급불능 발생

○ 장기적으로 손실 발생시 장래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

☞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산출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

- 무·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 ~ 40% 저렴한 상품
-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금전 손실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

<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 예시 >

일반 보험			무해지 보험			비교
월 보험료 20,539원 (총납입보험료 493만원)			월 보험료 13,813원 (총납입보험료 332만원)			(보험료) 표준형 보험대비 33% 저렴
경과기간	해약환급금	환급률	경과기간	해약환급금	환급률	(환급률) 납입기간중 환급금 없고 납입기간후 표준형의 50%
10년	137만원	55.4%	10년	-	0%	
20년	307만원	62.3%	20년	154만원	46.3%	
30년	383만원	77.7%	30년	191만원	57.7%	
40년	485만원	98.4%	40년	243만원	73.2%	
50년	712만원	144.5%	50년	356만원	107.4%	
60년	1,143만원	231.8%	60년	571만원	172.3%	

* 건강보험(질병후유장해 특약) 남자 30세 가입, 20년납, 100세 만기

- 상품개발시 해지자에게 일반 보험상품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할인하였기 때문에
- 해지율 예측 실패시에는 보험금 재원의 과부족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또는 보험사 재무리스크 발생 가능

< 예정 및 실제 해지율 차이에 따른 손익 비교 >

해지율 비교	예상재원 대비	보험회사	계약자
예정 > 실제 (과소 해지)	실제재원 부족	손실발생	낮은 보험료 부담*
예정 < 실제 (과다 해지)	실제재원 과대	이익발생	높은 보험료 부담

* 예상해지율을 높게 적용(해지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)할수록 보험료는 낮게 산출

II. 주요 개선방안

◆ **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·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**(Consensus-building)

1. 무·저해지상품 해지율

□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완납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무·저해지상품의 특성을 고려*하여 원칙** 마련

* 계약자 관점에서 납입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반면,
완납시 기대이익(장기 보장서비스 제공 또는 환급금 증가)이 크다는 점 고려

** 데이터 부족시 계약자가 이성적인 투자자처럼 행동한다고 가정(美실무표준 사례)

① (납입중) 해외사례·산업통계에 비추어 로그-선형모형(0.1%수령, 이하 '원칙모형')을 원칙 적용

-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他모형을 적용할 경우 엄격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

(1) 他모형: 선형-로그모형(완납시점 수령점 0%),

로그-로그모형(완납시점 수령점 0.1%)에 한정

(2) 감사보고서,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

- 他 모형에 대한 합리적인 채택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검증 내용
- 원칙모형과의 CSM, 최선추정부채 차이
- 원칙모형과의 지급여력비율(K-ICS) 차이(요구자본, 가용자본)
- 원칙모형과의 당기순이익 차이 등

(3)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의 차이를 정기(분기별) 보고

☞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

※ 금융감독원이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점검하고,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 신설하여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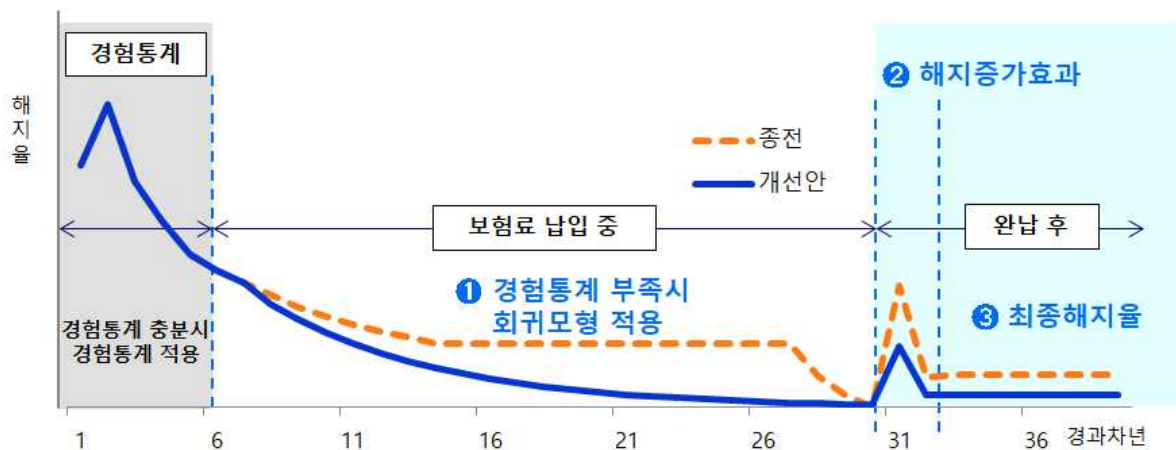
- 통계량을 확보해나가면서 규제수준 강화 등 조정 검토

② (완납후) 해약환급금 계단식 발생에 대해 해지증가효과*를 반영하고, 해외통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종해지율**을 추정

* 해지유보기간에 해당하는 해외 무·저해지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과 해지유보기간에 적용된 해지율의 차이를 가산

** (1)해외통계 0.8% 또는 (2)해외 표준형 대비 저해지상품 해지율 상대도 20% 활용

< 무·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 >



2.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

□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너스 지급 등의 사유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상품의 경우 보너스 지급시 추가해지 상승을 반영

○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하여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, 각 사가 30%를 하한*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선택하고 문서화

*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 11차년도 해지율(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)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.4%~30.2%인 점 감안

3.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

□ 경험통계가 충분하고,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*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하여 산출

* 예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(산업통계) 30대 89% → 40대 103% → 50대 140% → 60대 186%

□ 담보별로 경험통계의 집적수준에 따른 산출방법 차등화

- ① 자사 통계가 충분할 경우 확보된 자사 통계를 활용하여 경과기간별·연령군단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
- ②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군단별 상대도를 활용*하여 간접적으로 산출

* 예: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 × 군단연령별 상대도 = 경과기간·연령군단별 손해율

III. 향후 추진계획

□ 계리가정 가이드(실무표준)을 배포하여 '24년 연말결산시* 적용

* 단, 손해율 연령구분의 경우 결산 시스템 수정 등이 필요하므로 최장 '25.1Q까지 반영

○ 필요시 감독행정 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 추진

- **(현황)** 무·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적용해지율*은 관련 법규(감독규정 및 행정지도)에 따라 최적해지율*보다 보수적으로 산출

* 최적해지율 : 보험부채 평가(결산)시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
 적용해지율 :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
 (최적해지율을 기초로 보수적으로 조정)

< 관련 법규 >

- **보험업감독규정 제7-75조의2**(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)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. 다만, 제7-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**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**(행정지도) 제11조(적용해지율의 설정 기준)
- ①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적용해지율은 최적해지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최적해지율보다 보수적으로 산출한다.
 - ② 보험회사는 향후 계약자 행동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해지율 대비 적용해지율을 할인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할인 가능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사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**(고려사항)** 신설되는 최적해지율 실무표준에 맞춰 적용해지율 개선시 상품 전면 개정을 위해 실무표준 시행 후 약 3개월의 준비기간 필요
- 개선된 적용해지율을 적용한 보험료 재산출 및 기초서류 작성, 내·외부 검증, 안내자료 작성 등에 약 3개월 소요
 - 또한, 준비기간 중 최적해지율이 적용해지율 대비 낮게 산출되어 감독규정(§7-75의2)의 일시적 미준수 상태 발생 우려
- **(조치사항)** 신설되는 최적해지율 실무표준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해지율 모범규준을 개정*(‘25.1분기 중)하고, ‘25.4월 상품 개정시기에 시행토록 추진
- * 행정지도 개정을 위한 ‘행정지도심의위원회’ 개최(1~2개월 추가 소요) 등 감안
- 상기 적용해지율 개선 관련 상품 전면 개정 준비기간 중 감독규정(§7-75의2) 적용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